

통상 News Brief 2022 _ Vol.2

March 31, 2022

법무법인(유) 세종의 『통상 뉴스레터』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첨단기술 보호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목차

*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안 분석] USTR 2022년도 통상정책 어젠다 p.3

[주요 단신]

1) 관세 및 쿼터 p.5

- (03.16.) 미 USTR, 한국과의 철강 관련 232조 합의개정에 부정적 의견 피력
- (03.22.) 미국-영국, 철강 및 알루미늄 합의 발표

2) 무역구제 p.5

- (03.07.) 프랑스, 통상정책 및 유럽 전략적 자율성(Trade policy and European Strategic Autonomy) 컨퍼런스 개최

3) 수출통제/경제제재 p.6

- (03.11.) G7 지도자들 우크라이나 사태대응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 (03.15/17.) 미국, EU, 러시아/벨라루스의 MFN 적용 정지 검토
- (03.23.) 일본, 경제안보법안 추진 진행 중

4) 투자 p.7

- (03.04.) 필리핀, 중소기업 설립 투자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해외투자법 개정

5) FTA·지역협정 p.7

- (03.10-11.) 미 USTR과 상무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관련 공공 의견수렴(request for comments) 공고
- (03.16.) 미국-영국, 대서양 무역의 미래에 관한 대화(Dialogues on the Future of Atlantic Trade) 계획발표
- (03.25.) 한국, CPTPP 가입관련 공청회 개최

6) 디지털 p.8

- (02.25.) 영국-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Digital Economy Agreement) 서명

7) 기후변화/환경 p.9

- (03.15.)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 CBAM 안 발표

8) 공급망 p.9

- (02.24.) 바이든 정부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주요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계획 발표
- (03.21.) WTO 글로벌 공급망 포럼 개최

9) 기타 p.10

- (01.27.) TRIPS 면제 합의 도출

USTR 2022년도 통상정책 어젠다

(주요내용) 3월 USTR은 2022년도 미국의 통상정책 어젠다를 발표하였음.¹ 해당 어젠다는 보다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회복력있는 통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 5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5가지 정책은 구체적으로 △ 근로자 중심의 통상정책, △ 미-중 통상관계 재조정, △ 무역파트너국 및 다자기구와의 연대, △ 집행을 통한 통상정책 신뢰강화, △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통상정책 촉진 및 이해관계자 관여 확대임

1. 근로자 중심의 통상정책

근로자 중심의 통상정책(worker-centered trade policy)은 노동권 강화뿐만이 아니라 탈탄소(decarbonization), 지속가능한 환경관행 촉진을 위한 통상정책의 활용을 담고 있음. 더불어, 미국농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시장창출 노력도 포함됨. 이외에도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과 파트너국과의 공조, 코로나 팬데믹 대응 등 다양한 이슈를 아우르고 있음

2. 미중 통상관계 재조정

미국은 중국이 비시장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해외 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장접근을 허용하며, 자국의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 지재권과 기술을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일부 상품의 구매약속을 넘어, 보다 정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국내 투자를 확대하여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미국 근로자와 소비자를 중국과의 통상 및 경제적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급망 회복력을 구축해나갈 것을 확인하고 있음. 특히 강제노동 금지는 단순 불공정 경쟁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도덕적 문제(moral stain)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언급함

3. 무역파트너국 및 다자기구와의 연대

이를 위해 구체적인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 WTO, △ OECD, △ 양자간 FTA와 무역투자협정(TIFAs). 마지막 FTA와 TIFAs와 관련해서는 EU, 인도, 일본, 케냐,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한국, 대만, 싱가포르를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미FTA상의 노동 위원회(Labor Affairs Council), 환경 위원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를 2022년에 진행할 것을 확인하고 있음

¹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2/march/ustr-releases-2022-presidents-trade-policy-agenda-and-2021-annual-report>

4. 집행을 통한 통상정책 신뢰강화

USMCA의 신속대응메커니즘(Rapid Response Mechanism)을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침해명단(Notorious Markets List) 발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특혜무역 프로그램 운영, 외국의 환율 조작 정책이나 관행 개선을 위한 제301조 활용강화를 언급하고 있음. 나아가 무역 상대국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그들이 통상협정에서 약속하고 있는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나갈 것임을 확인하고 있음

5.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통상정책 촉진 및 이해관계자 관여 확대

공평하고 회복력있으며 견고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종과 젠더에 대한 형평성을 핵심 요소로 고려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고 있음. 나아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그들의 견해와 우선순위를 통상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을 확인하고 있음. 그 외에도 노동단체, 환경 그룹, 소비자 그룹, 비정부 기구,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여를 확대해 나갈 것임

이러한 2022년도 통상 어젠다는 향후 5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Goal)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Strategy) 및 세부정책(Objectives)을 담은 전략계획(Strategic plan)에도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음²

(의의) 2022년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전략이 현실화 되는 시기로 다소 모호했던 근로자 중심의 통상정책과 IPEF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요소들이 확인되고 있음. 특히 근로자 중심의 통상정책의 경우, 노동, 환경 이슈뿐만이 아니라 농업, 공급망, 팬데믹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는 정책임을 유념해야 함

나아가 이러한 새로운 통상의제들은 한미 FTA 뿐만이 아니라 IPEF, WTO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인바, 각 포럼별로 해당 의제들에 대해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과 집행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USMCA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집행 및 모니터링 도구들-신속대응메커니즘, 정기적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힐 필요가 있음

² [USTR Releases Fiscal Year 2022-2026 Strategic Plan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1) 관세 및 쿼터

3월 16일 한미 FTA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2018년 이루어진 한미 철강합의 추가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 USTR 대표인 Kathrine Tai는 한국의 자동차, 바이오농산물 분야에 대해 보다 원활하게 시장접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3월 26일 미 상무부 장관도 한국과 철강제품 쿼터 조정 재협상은 미국의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언급함

3월 22일 미국과 영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합의를 발표함. 미국은 TRQ방식을 적용하여 영국에서 제련되고 제강된 (melted and poured) 50만톤의 철강을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함. 알루미늄의 경우 비가공 알루미늄(unwrought aluminum) 900톤, 반가공알루미늄(semi-finished aluminum) 11,400톤을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함

- 동 합의문에서는 양국이 진행 중인 관세협력, 무역구제협력 강화를 비롯하여 양국간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 모니터링, 비시장경제의 초과생산 및 탄소집약 계산방식에 관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
- 특히 마지막 비시장경제의 초과생산 및 탄소집약 관련 협력에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과 관련하여 보다 시장지향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조치들을 강화하고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유하기로 함

2) 무역구제

3월 7일 EU 의장국인 프랑스는 “통상정책 및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컨퍼런스(Conference on Trade Policy and European Strategic Autonomy)”를 개최하고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구축하기 위해 통상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함

- 컨퍼런스는 총 4개의 라운드로 구성되었으며, △ EU의 가치사슬, △ 다자적 통상시스템의 역할, △ 불공정 무역관행(abusive and unfair trade practice), △ 경제적 강제(economic coercion)에 대한 EU차원의 대응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음
- 동 컨퍼런스에서는 EU가 진행 중인 해외보조금(foreign subsidies) 규제법안과 경제적 강제(economic coercion)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특히 해외보조금과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Vestager는 노동기준이나 환경기준이 포함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통상정책이 노동, 환경 문제까지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현재 논의 중인 해외보조금 규제법안은 EU 시장내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을 유지하는 목적에 한정되어 있음을 분명히 함

3) 수출통제/경제제재

3월 11일 G7 지도자들은 러시아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다양한 제한적 조치들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더하여 7가지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들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음

- 첫째, 주요 상품거래시 러시아 최대국대우(MFN) 적용을 배제하는 국내적 절차를 진행할 것, 둘째, 러시아가 IMF, World Bank 등 다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할 것, 셋째, 러시아 엘리트와 그 가족 및 측근들에 대한 압박 캠페인을 지속할 것, 넷째, 현재 부과하고 있는 제한조치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이를 위해 제재가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자산(crypto-assets)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다섯째, 러시아의 허위정보 유출에 대응하여 러시아인들이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여섯째, 사치품 등 주요 상품에 대한 수출입과 기술에의 접근을 추가적으로 제한해 나갈 것. 일곱째, 러시아 엘리트들은 신규 차입이나 지분 투자 및 다른 형태의 국제통화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

EU는 3월 15일 제4차 제재 패키지에서 러시아에 대한 MFN 적용 정지 계획을 언급함

- MFN 적용정지를 통해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관세인상 대신 수출입금지(ban)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함. 이는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러시아 은행들의 SWIFT 배제를 통해 러시아에 대해 서비스 분야에서 MFN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3월 17일 미국 하원에서는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해 항구적 최대국대우(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를 중단(suspension)하는 법안이 통과됨.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2024년 1월 1일까지 Column 2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

-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미 대통령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Column 1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향후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멈추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본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안보법안(economic security Bill)의 추진을 보다 앞당길 것을 발표함

- 법안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주요한 물품(strategically important goods)으로 지정하고 국내 공급망 강화 및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하고 있음
- 나아가 AI와 양자컴퓨터에 대한 민관의 연구 기술 개발 협력을 촉진하고, 잠재적으로 군사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공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 중요 인프라-가스, 석유, 전기, 철도, 화물, 항공, 공항, 국제항공, 통신, 방송, 우편, 금융 및 신용카드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음. 기업이 해당 분야에 대해 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그들의 계획을 미리 보고해야 하며, 해당 공급자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루어지게 됨
-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미만의 징역이나 최대 11,850엔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

4) 투자

필리핀은 3월 4일 자국의 해외투자법을 개정함

- 개정을 통해 해외투자자는 필리핀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할 경우, 해당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으며, 최소 50인의 필리핀 국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
- 나아가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근로자를 15인 이상 고용하고,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업 설립시 요구하는 최소 자본금을 10만달러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된 것임

5) FTA · 지역협정

IPEF 관련 미국내 의견수렴 절차 개시

- 2월 18일 미국 내 12개의 산업, 경제 단체들은 바이든 정부의 IPEF 런칭결정을 찬성하는 공개서한을 보냄. 해당 서한에서는 IPEF가 구속력 있고(binding) 집행가능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 농부 및 근로자들에게 시장개방을 통해 추가적인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음
- 나아가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세우고 매년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무역원활화, 모범규제관행, SPS 규칙, TBT, 지재권보호, 반부패와 같은 최신 이슈들을 다루어 줄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특히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서도 개방되고, 신뢰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차별, 적법절차(due process),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 법의 지배와 같은 통상원칙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음
- 3월 10일에는 IPEF의 4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절차가 공지되었음. IPEF는 1) Fair and Resilient Trade, 2) Supply Chain Resilience, 3) Clean Energy, Decarbonization, and Infrastructure, 4) Taxation and Anti-corruption의 4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될 예정이며, 첫번째 분야는 USTR에서, 두번째에서 네번째 분야는 상무부에서 담당할 계획임
- USTR은 첫번째 분야인 공평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Fair and Resilient Trade)과 관련하여 노동, 환경 및 기후, 디지털 경제, 농업, 투명성 및 모범규제관행,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분야가 포함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근로자 중심의 약속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나아가 현재로서는 관세장벽을 다루지 않을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 3월 11일 미 상무부에서도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분야와 관련한 공공의견을 수렴할 것을 공지하였음. 의견은 공고일로부터 30일 동안 제출할 수 있음

3월 16일 미국 USTR와 영국 통상부는 두 국가간의 대서양 무역의 미래에 관한 대화(Dialogue on the Future of Atlantic Trade)를 시작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첫 대화는 3월 21~22일까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진행될 계획이며, 2차 대화는 영국에서 4~5월 중으로 진행될 계획임

- 해당 대화는 작년에 새롭게 발표된 대서양 헌장(Atlantic Charter)에 따른 것으로 미국과 영국이 상호 관심있는 국제통상 우선순위를 발전시키고, 근로자와 기업의 혁신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대화에서는 공급망,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Build Back Better 어젠다, 디지털, 친환경, 중소기업지원 등의 의제가 포함될 것으로 언급되고 있음
- 대화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보다 현대적이고 공평하며 책임있는 글로벌 경제를 구축하는데 통상정책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계획임

3월 25일 한국 CPTPP 가입관련 공청회 개최

-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무역협정으로 영국(2월), 중국(9월), 대만(9월), 에콰도르(12월) 등이 공식 가입신청을 한 상황
- 한국도 CPTPP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가치도 확보하기 위하여 동 협정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공청회를 통해 농수산분야의 충분한 피해보전 방안과 제조업분야 소부장·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패키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6) 디지털

영국과 싱가포르는 2월 25일 디지털경제협정(Digital Economy Agreement) 최종타결 발표

- 동 협정에는 △ 개방되고 포용적인 디지털 시장, △ 데이터 흐름, △ 소비자 및 기업 보호장치, △ 디지털 무역시스템, △ 금융서비스, △ 기술 파트너십, △ 기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영국과 싱가포르는 디지털경제협정 외에도 5개의 협력협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하였음. 협력협정은 핀테크, 디지털통관, 사이버안보, 디지털 아이덴티티, 전자적 무역서류 및 전자송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7) 기후변화/환경

3월 15일 각국의 장관들로 구성된 EU 이사회(EU Council)에서는 CBAM (안)을 발표하였음

- 이사회는 CBAM의 적용범위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로 한정하고 있어 EU 의회(안)에서 제시되었던 화학, 수소는 제외하였으나, 알루미늄은 포함되었음. 나아가 철강에서 제외되었던 튜브(tube), 이음쇠(pipe fitting) 및 구조물(structure)을 포함시키고 있음
- 반면 EU 의회(안)에서 제안되었던 중앙집권적 방식을 일부 받아들여 EU차원의 Registry를 설립할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EU 각국도 CBAM 책임당국(Competent Authority)를 운영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나아가 최소 기준을 두고 150유로 이하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CBAM의 적용 예외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적용대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전환기간도 이사회(안)처럼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제안하고 있음
- 하지만 무상할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음. 의회(안)에서는 무상할당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이사회(안)에서는 CBAM 확인서(certificates) 구매 후 폐기(surrender)되는 건에 대해서는 EU ETS차원에서 무상할당을 조정할 것을 언급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CBAM과 같은 탄소가격제도를 둘러싼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 기후 클럽(Climate club)을 구성하여 관련 국가들과 협의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있음

유럽 의회는 5월에 CBAM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임

8) 공급망

바이든이 미국의 주요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여,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약 1년 후인 2월 24일 6개의 산업-에너지, 교통, 농산품, 공중보건 및 생물학적 준비(biological preparedness), ICT, 국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함

산업별 공급망 조사에는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및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참여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공급망의 경우 상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공동으로 그 공급망을 진단하고 정책적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 (현황) 보고서는 미국이 ICT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오고 있으나 인쇄회로기판(PCBs), 디스플레이, 및 전자기기 조립품들의 경우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정책적 제언) 첫째, 미국내 ICT 제조기반을 활성화할 것. 인쇄회로기판(PCBs), 반도체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적절한 공공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금을 지원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둘째, 안전하고 투명한 공급망을 통해 회복력을 구축할 것. PCBs와 관련하여 안심공급자프로그램(Assured Supplier Program)을 도입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무부가 Critical Supply Resilience Program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셋째, 국제협력 강조, 넷째, 미래 ICT 기술에 투자, 다섯째, ICT 인력 파이프라인 강화, 여섯째,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ICT 생산 시설 도입, 일곱번째 민관 대화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연대구축, 여덟번째 ICT 산업의 기초인 PCBs와 마이크로 전자기기와 같은 제품들에 대한 장기 수급정책계획 수립

WTO에서는 3월 21일 글로벌 공급망 포럼(Global Supply Chains Forum)을 개최함

- WTO 사무총장은 현재의 통상시스템은 기후 재해나 바이러스가 상품, 서비스, 사람들의 이동을 바꿀수 있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였음
- 포럼에 참석한 민간부문 대표들은 상품, 서비스, 데이터 흐름을 제한하는 일부 정부의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경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특히 SMEs들의 경우, 이로 인해 운송 및 물류에 있어 불이익을 크게 받고 있음을 언급함
- 포럼에서는 △ WTO가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 특정 지역 또는 부문별 공급망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파트너국가들이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보다 구체적으로 WTO에서 무역원활화, 상품의 통관 단축, 운송 및 물류서비스의 자유화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과 공급망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이나 로보틱스와 같은 디지털 기술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시장과 투자가 다변화되어야 하는 점이 언급되었음.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들은 탈탄소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된다는 점도 강조되었음

9) 기타

WTO TRIPs 면제와 관련된 합의안이 도출되었음. USTR은 보도자료를 내고 WTO사무국이 주도하는 비공식 논의에서 남아공, 인도, EU와 미국이 참여하여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타협안을 마련했음을 발표함

- WTO 사무총장은 이러한 합의안이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WTO 회원국 전체의 지지를 받는 작업을 지속해야 함을 언급함.
 - 미 상공회의소는 논의중인 제안서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함. 해당 제안서는 백신 생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실질적인 이슈인 라스트마일 분배(last-mile distribution)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음
- ※ 라스트마일(last-mile) 유통, 운송, 통신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와 만나는 최종단계를 의미함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s에서도 TRIPS 면제 논의는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어 잘못된 방향이며, 논의가 처음 이루어지던 2021년 5월과 달리 백신생산이 현재는 연간 12억개에 이르는 등을 감안할 때 낡은 제안(outdated proposal)이라고 평가함. 나아가 특허를 면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백신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음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는 빠르고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통상질서에 시의성있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유) 세종의 부속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법무법인(유)세종이 쌓아온 통상역량을 결집하여, 통상, 투자,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이슈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세종의 고객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